

주세법 위반에... 대학 축제 '주점' 사라지나

국세청 벌금 처분 방침... 교육부, 대학에 주류 판매 자제 공문 주점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해 온 지역대학 총학생회 '당혹'

광주지역 대학교 축제에서 친목의 대표 공간으로 꼽혀온 '주점(酒店)'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내에서 음주와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세청이 대학교 축제 시 주점의 주류 판매에 대해 주세법 위반이라며 벌금처분을 하겠다는 원칙을 교육부를 통해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축제기간 학교·동아리별로 특색있게 주점을 꾸며 친목·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수익금으로는 단체 운영비를 충당해온 대학 총학생회측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9일 광주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일 교육부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주류 판매

관련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주류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처분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등은 총학생회측에 교육부의 공문 내용을 알리고, 축제 기간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주세법을 살펴보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매년 5월이면 대학 축제를 열고 있는 전국 대학들은 주점을 폐지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등 술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대학이 5월에 축제를 하는 것과 달리 5·18민주화운동의 영향 등으로 주로 9~11월 사이에 축제를 여는 광주지역 대학들도 앞으로 축제 개최시 주점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

광주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학생회와 학교, 동아리 등은 축제기간 동안 학교에 주점을 열고 술과 음식을 판매해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2학기에 열리는 축제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주지역 대학과 총학생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교육청의 공문 받은 뒤 총학생회 측에 알린 뒤 축제 기간 동안 주

류를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대학들도 공문을 받은 뒤 곧바로 총학생회에 통보했다.

한희원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올해 축제부터는 주점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주점 수익금으로 학과, 동아리 등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온 만큼 학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이용혁 광주지방국세청 소비팀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대학교의 축제기간 동안 주점운영에 따른 주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자의 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죄 적용 안해

경찰 "살인 고의성 없어" 5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애초 박씨 등 7명이 폭행을 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서 택시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던 사실은 확인됐으나 누워있는 A씨를 돌로 때리지 않고 바로 옆 땅바닥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선관위, 설 인사장 발송 강진군수 예비후보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강진군수 예비후보 A씨와 측근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진군 전체 가구 50.1%에 달하는 9204명에게 설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8297명에게 추석 인사장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인 B씨와 선거 관계자 C씨는

A씨와 공모해 900만원 상당 제작·발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인사장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성명을 나타낸 인사장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불륜 남녀경찰관 징계는 적법하다"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불륜을 저지른 남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원국 부장판사)는 "A(여) 순경과 B순경이 각각 전남지방경찰청장상 상대로 낸 해임과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모두 배우자가 있는 이들 경찰관은 2015~2016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다.

B순경은 평소 태도, 누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소정 심사 단계에서 징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지속하지 않았다"면서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정도가 적법하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전북도의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5·18 북한 개입설 옹호 이상로 방통위 사퇴해야"

전북 5·18구속부상자회 촉구

5·18 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등은 9일 "5·18 북한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부상자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기독행동,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뚤어진 역사관과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이 위원이 방통위 위원으로 심의 결

정에 참여하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로 전주 모대학 조빙교수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올해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북한군 투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표현한 지만원씨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광주일보 4월24일자 6면)

심의 대상이 된 글은 지씨가 지난해 4월

11일 올린 것으로, "5·18은 전라도 집결들과 북괴가 아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녀자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5명 위원 중 유일하게 지씨의 글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삭제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대법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원 과징금 정당"

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여배우 명예훼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법정구속

○...법원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 씨를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법정구속.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인 이재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같은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통해 여배우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빚미로 병원을 상대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를 했는데, 류판사는 "허위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